

2023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가. 개요

대주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명회계
일 시: 2023년 12월 16일(토) 10:00~20:0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주 최: 한국회계학회, 이화여자대학교
후 원: 삼일회계법인,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KB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PFK서현회계법인, 흥모 앤 송자장학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세무학회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회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

[사회·발표]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표 1]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토론 1]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발표 2]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토론 2] 배창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발표 3] 양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팀장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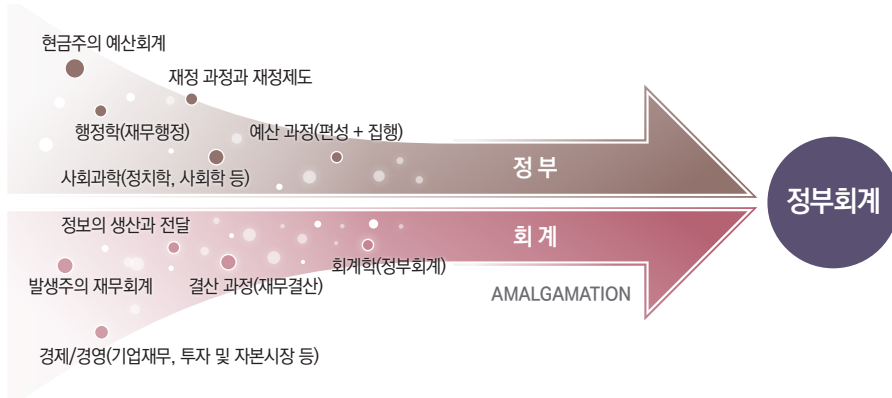
[주제 1: 정부회계 연구의 현황과 이론적 정향]

발표 정부회계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향후 대안 점검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1) 정부회계 연구의 정체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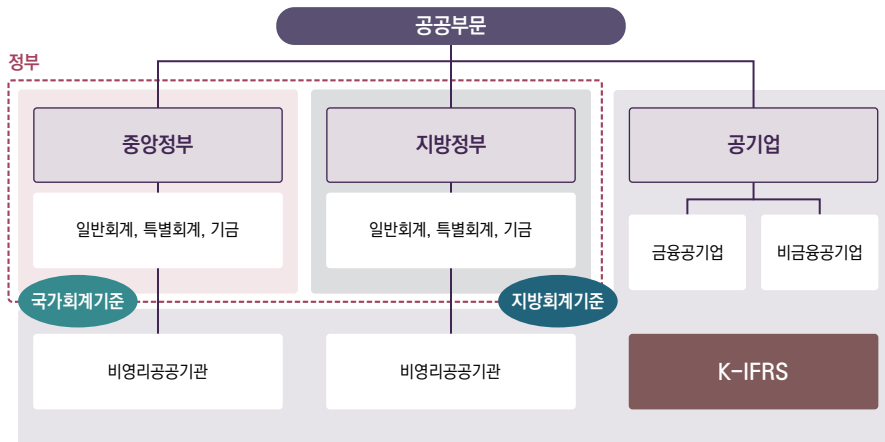
- 정부회계 연구의 한 축은 정부의 재정운영 측면에 대한 연구로서, 재정 과정의 커다란 한 축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심의를 담당하는 예산 과정에 주목함

- 또 다른 한 축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측면으로서, 결산 과정에서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함
- 이 양축이 함께 국가재정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음



2) 공공부문 회계기준들이 각 실체에 따라 다름

-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지방정부는 지방회계기준을 사용하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및 비영리법인은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3) 공공부문화계 연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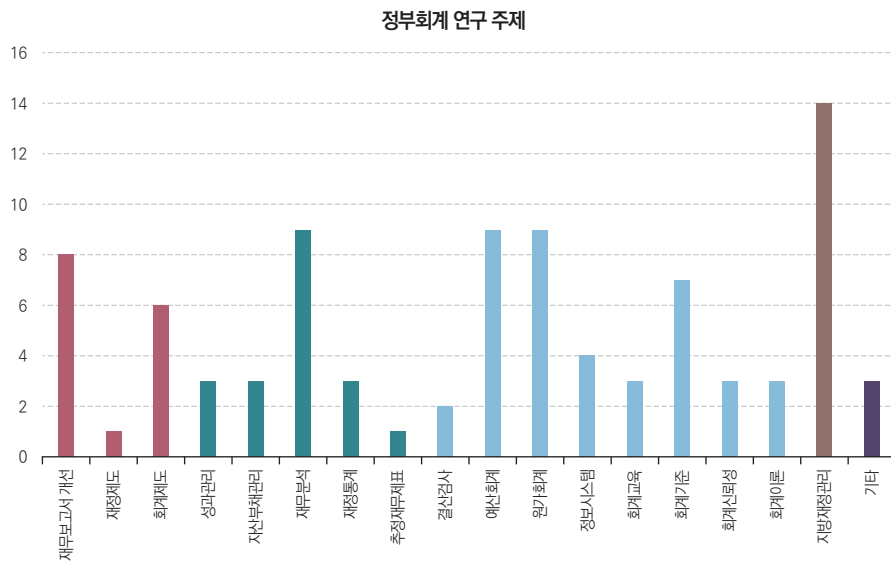
- 공공부문화계 연구의 실체/주제별 유형 분류
 - : 비영리법인이 97편, 25%로 가장 높은 비중
 -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21%, 20%로 유사한 비중
- 공공부문화계 연구의 분석방법별 유형
 - : 개별 사례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이 대부분
 - : 권선국 외(2012): 다양한 방법론 필요

표 1 공공부문화계 연구의 분류 현황

실체/주제별	개수(개)	비중(%)	분석방법별	개수(개)	비중(%)
비영리법인	97	25	사례 분석	205	54
지방정부	80	21	실증 분석	140	37
공공기관	76	20	설문 분석	20	5
중앙정부	57	15	기초통계 분석	16	4
정부일반	27	7	소계	381	100
기타	25	7			
외국사례	11	3			
재정통계	5	1			
문헌분석	3	1			
소계	381	100			

그림 1 정부회계 연구(2012~2022년) 게재 논문 검토

(단위: 건)



4)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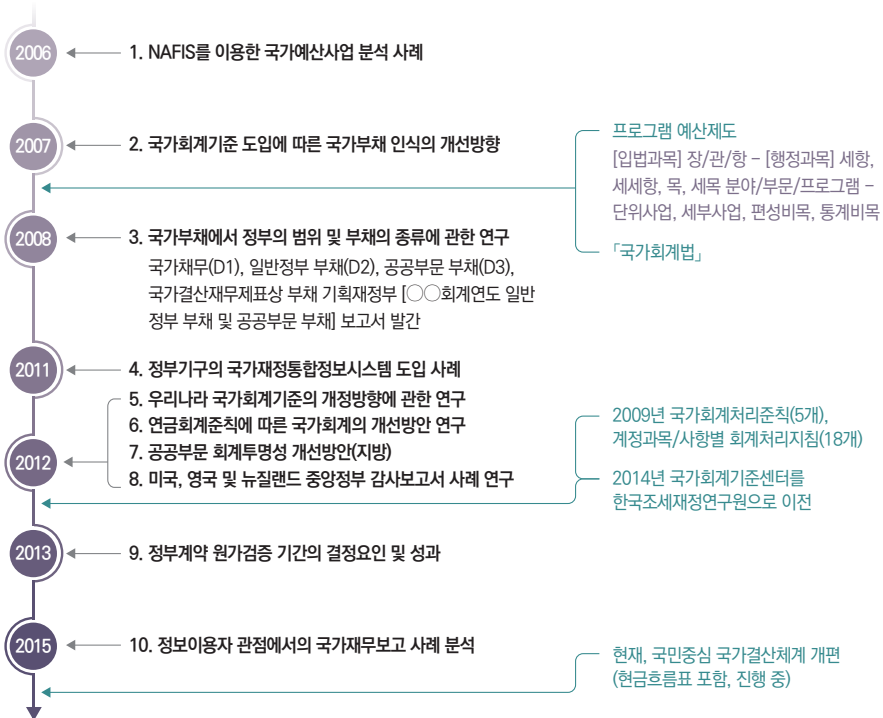
-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회계를 중심으로 지방회계 및 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포진하며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통합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가 존재함

: 가장 많은 연구 결과는 국가회계 분야에서 수행되었는데, dBrain의 전신인 NAFIS에 대한 최초 연구를 시작하였음

: 국가회계의 주된 연구 결과로 계정과목 회계처리에 해당되는 우발부채와 회계 오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회계기준인 개념체계, 보고실체, 측정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회계정보를 활용한 결산서 비교분석과 추정재무제표 등의 연구가 진행됨

: 국가회계기준으로 통합되지만 자체 기준으로 관리하는 연금기금과 육군정보시스템, 감사시스템과 원가를 다른 가지로 구분하여 구조도를 작성함

그림 2 『회계저널』에 게재된 정부회계 연구 선행연구 현황 1(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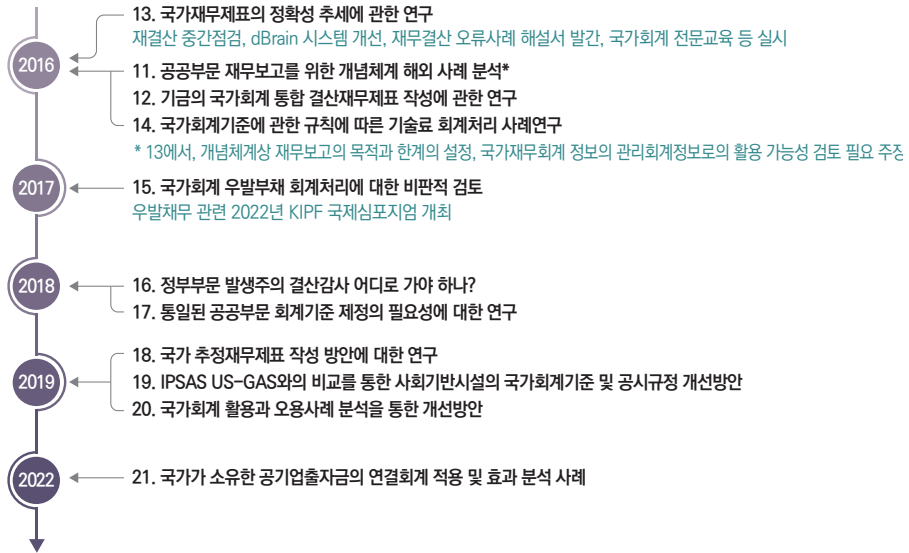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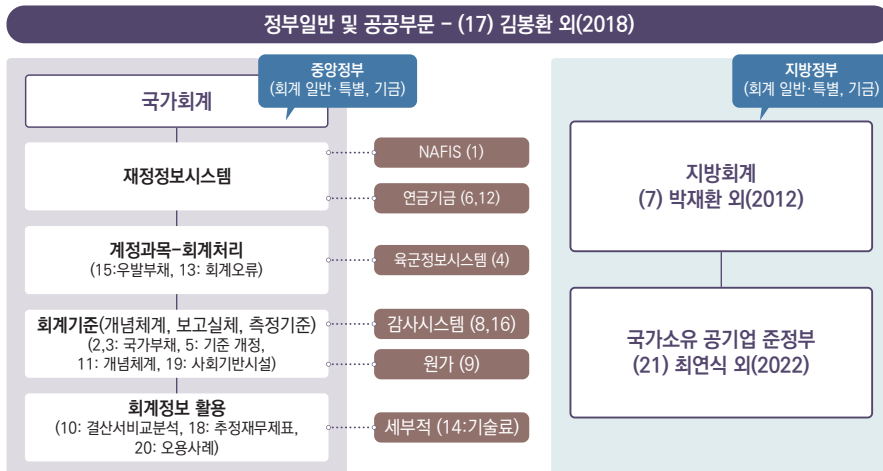


그림 3 선행연구 구조도(『회계저널』 중심)



5) 향후 정부회계의 연구의 방향성

- 기업회계제도에 기반하여 고안된 정부회계제도의 근본적 부정합성은 없는가? (최연식 외, 2016)
: 정부회계제도의 본질적 질문
- 최연식 외(2016, p. 254)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관리회계정보로 활용가능성을 검토

- 김완희 외(2019, p. 51) 「국가회계 활용과 오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재정제도 간의 연계부족을 지적하며 정부회계 연구의 확장 필요

토론 1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 재정개혁의 하나로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는 2007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는 2009년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 후 2011회계연도 부터 발생주의 국가회계 결산서를 국회 제출

1)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학술지별 발표 빈도)

2) 성과보고서(2009회계연도부터 국회에 제출)

① 결산보고서 = 결산개요 + 세입세출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② 성과관리제도

-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 위주로 운영하는 제도(효율성 제고)

③ 성과관리주기: 성과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성과보고 → 성과정보의 환류

3) 재무회계 결산과 성과관리

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② 예산과 회계의 연계: 예산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집행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

- (보다 완전한 정보를 활용한) 예산 과정의 합리적 통제, 합리적 의사결정의 확보
-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성과관리를 통한 환류

4) 회계학자들의 역할

- ① 예산과 예산 과정에 대한 회계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함
 - 예산회계의 구조: 예산(회계의 중심), 수입, 지출
 - 예산회계의 주 목적: 예산의 배분 및 역할을 강조
- ② 성과정보의 신뢰성 강화
 -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대표성과 타당성)
 - 확정된 예산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도전적인) 성과목표치
 - 성과 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 ③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우선순위 고려)
 - 성과 미흡의 원인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 예산투입 부족?
- ④ 성과관리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 ⑤ 성과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접근성 확보



[주제 2: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ESG 공시기준 제정의 이론적 쟁점]

발표 2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수립 가능성 논의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경과

- 2022년 1월, 세계은행은 자체 보고서¹⁾ 발간을 통해 민간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절반 정도를 국제시장이 차지하는 등 그 규모가 큰 공공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한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지적에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2022년 3월, IFRS S1, S2 공개초안이 발표되었으며,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자문보고서(CP)를 회람하면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과는 별도로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2022년 12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기후 관련 공시사항 및 천연자원 등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중점으로 공시기준 마련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3월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기준 제정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작성하기 위한 IPSAS 개념체계와 IFRS S1, S2 및 GRI 기준을 참고하겠다고 공표하였음

2) IPSA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 논의 현황

- 2023년 12월, IPSASB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안)을 살펴보면, 핵심 문안은 투자자 중심의 IFRS S2와 영향을 반영하는 GRI 기준(1, 3, 201, 305)을 차용하고, UN SDGs의 내용도 동시에 참고하는 등 다른 기준들의 문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기준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향후, IPSASB는 2024년에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2025년에 기후 관련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지난 2023년 9월 회의에서 뉴질랜드 XRB의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체계가 성공적으로 수립된 데에서 자

1) World Bank, "Sovereign Climate and Nature Reporting: Proposal for a Risk and Opportunities Disclosure Framework," 2022,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615001312229019/pdf/P170336065a94c04d0a6d00f3a2a6414cef.pdf>, 검색일자: 2023. 12. 16.

신감을 얻어 이와 같은 목표를 수립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뉴질랜드는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가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도 IFRS S1, S2에 대응하는 기준 제정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기후 관련 공시기준 마련이 가능한 상황임

3) IPSA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 현재 IPSASB는 기업회계의 투자자 중점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공공부문으로 가져와 재무보고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IFRS S1, S2 적용의 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를 비교해 보고, 재무보고와 지속가능성 보고의 근본적 성격 차이를 비교해 본 후, GRI와 IFRS 등 원칙적으로 다른 두 개의 기준 조합이 가능할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정보이용 목적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제공자(투자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단일 목적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정부회계에서는 의사결정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회계 책임성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함
- (정보 수요의 차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만을 알고자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함. 즉, 정부회계 정보의 이용목적은 다중성을 띠는데, 자원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 따라 회계 책임성과 의사결정 유용성 등의 정보 수요 목적은 상이함. Demski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le Theorem)가 암시하듯이 각기 다른 정보 수요를 동일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움
- (정보의 시간적 범위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현재의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정보를 요구하나, 정부회계에서는 재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른 시간의 범위도 병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IFRS S1, S2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유용성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GRI 기준은 의사결정 유용성이 아닌, 사회 및 사람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이 제정되었음. 이와 같이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기준을 합치는 것만으로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토론 2 배창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이 연구의 경우,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보 제공인 지속가능성 보고와 투자자 중심의 정보 제공인 재무보고 간 근본적인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의 프레임워크를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함
- 첫째, IPSASB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회계책임과 의사결정 유용성을 정부 재무보고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 및 사회·정치적인 이슈가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의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
- 둘째, 공공부문의 재무보고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재무보고 사용자와 정보수요를 식별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개발될 필요성을 주장함
- 셋째, IFRS S1, S2는 재무보고의 주요 사용자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나, 다른 기준은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
- 지금의 시대 정신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기후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슈와 공급망 내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항목이나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공공부문 기관 특성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항목을 추가하면 좋을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



[주제 3: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3 국가회계정보시스템 효과성 평가 및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양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팀장)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매년 일정 수준의 전기 오류 수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재무제표의 회계품질이 높을수록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Feng et al., 2015),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국가재무제표는 국민으로부터 국세, 부담금 등의 조세를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자원을 다양한 국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운용한 결과물이므로,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 측면에서도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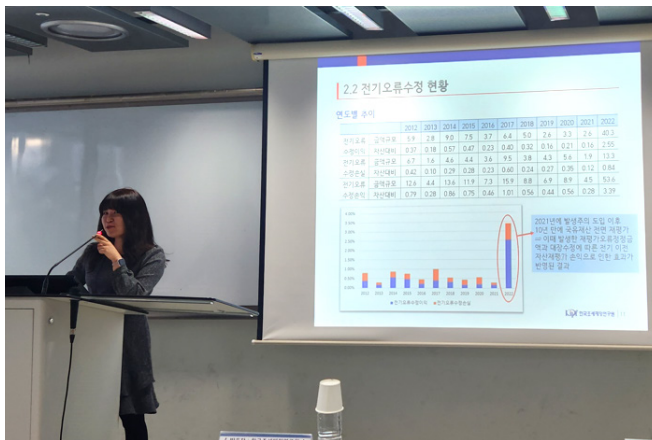
이 연구는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개선방안을 검토함

국가결산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는 정부 중앙부처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 설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회계오류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 실시
- 인적 요인은 짧은 결산 업무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남
 - 자산재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사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전문가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일선 결산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일임하는 상황이 오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

- 결산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결산지원제도 참여 경험 부족과 자산 관련 오류에 대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응답함
 - 국유재산 관련 오류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초데이터의 부정확성에서 야기되어 결산담당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 존재
- 결산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나 인센티브·페널티 제도가 미비하여 결과 환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책임관 제도 활성화, 결산담당자의 회계 전문성 강화,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연계를 제안함



국가회계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